학생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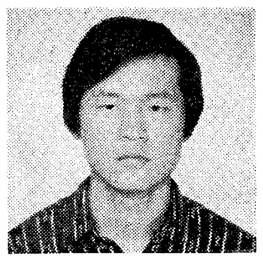
연방제적 통일 방안에 대한 고찰

민족 통일 방안의 새로운 시각을 위하여

두 체제의 통합을 궁극적인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가 바람직

민족 화해·동질성 회복 위해 모순적 구조 청산해야

통일로 가는 과도적 기구, 남북 이념 조절 역할 충분



정 성 장
<85학년도 정외졸>

Ⅰ. 問題의 提起

8·15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통일운동의 역사는 우리민족이 外勢와그에동조한 內勢에 의해 상호적대적인, 두개의 이질적인체제로 분열되고 그로 인해 양지역의 민중들 상호간에 직접적인 대화와 他方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곤란해지게 되고, 각기 한 지역의 정부가 他方지역의 현실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며 통일정책의 형식과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때로는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부당하게 억압되어져 왔음을 보여주고있다.

오늘날에는 민족의 통일방식에 대한 제반 논의에있어서 하나의 신성불가침적인 전제가되어버린「평화통일」이라는 기치가 이승만정권 시대에는 조봉암에 의해 주창되었다가 그가 처형당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은 이러한 부당한 억압의 대표적인사례일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는 북한이 고려연방제안을 주장하기 3개월 전인 1973년 3월에 전新民黨 대통령후보인 金大中씨가 당시 망명지였던 일본 동경의 의신구락부에서 완만한 형태의 연방제안인「공화국 연방」방식을 제안하였음으로 인해 그로부터 거의 7년이 지난 1980년 5월의 군법회의에서 부당하게 공산주의자에 대한 동조행위로 들려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연방제에대한 올바른 인식·평가가 정착되지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1960년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여 옴으로써, 이에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사회에서 연방제콤플렉스라고 명명할 만한 특이한 심리상태가 조성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혹자가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일체의 거부가 아닌 수정주의적 수용을 내포하는 논의를 전개하면, 대체로 그 논의의 내용과 현실적인 의미에 대한 신중한 분석·평가 작업을 전개시키기도 전에 성급하게 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북한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현실을 무시한 지적·도식적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하여 우리들의 무지와 편견에의한 멸시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것들이 갖는 의의와 현실적 한계를 전체 사회적인 맥락속에서 규정지음으로써 그것들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시도할 것이다.

Ⅱ.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1. 1960·70년대의 연방제 주장

북한 정권이 연방제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4.19혁명 후 한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고 평화통일논쟁이 한창벌어지고 있었던 1960년의 8.15 기념식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에서 비롯된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남한측이 당장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은 또한 더나아가 만약 남한측이 당장 연방제조차 받아들일수없다면 남북한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물자를 교역하여 경제건설에서라도 서로협조하고 매우포용력있게 보이는제안을하였다.

당시의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당시 북한 경제력의 남한 경제력에 대한 우월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종결 후 북한은 1954~56년에 걸친 3개년 계획과 1957~60년에 이르는 5개년 계획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반면, 당시 남한은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무계획적인 경제운용을 함으로써 별다른 경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연방제실시를 통해 남한의「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도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金學俊교수는 당시의 북한의 주장이 연방제라기보다는 국가연합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근거로서 첫째, 北韓이 당시의 제안에서 南北韓양정부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로 연방정부의 창설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다만 남북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5월의 광주사태에 대한 진압, 전두환 국보위常委長의 대통령취임 등에 대한 항의로써 일방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남북간에 대화가 중단되고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의 80년대 평화제스쳐인「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새로운 통일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전제조건의 제시 : 김일성은「보고」를 통하여「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대화합의 3대원칙」하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수있는 가장 현실적이고합리적인 방도」라고 미화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전제조건들이 남한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첫째, 현 남한정부의 퇴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등의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 그리고 유신체제를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할 것. 둘째, 긴장안은 현재의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화추진세력과 민중운동들을 북한에의 동화적 통일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되고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이처럼 남한사회의 북한정권에의 일방적 개방 및 체제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북한은 하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지 않고 오직 남한만이 평화통일의 장애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사회의 전부문에서 민주화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서 특히 민중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개인에대한 과도한 권력과 권력과 권위의 집중을 의미하는「개인숭배」라는 그릇된 악습이 청산되고경제부문에서의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전을 억압하는부당한 권위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청산되며, 非民主的이며 또한 非마르크스-레닌주의적이기까지 한 과(3)의 조항은 南韓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의수행을통해 합작통일을 성취하기위해 南의 민중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에서 안출된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다.

北韓의 정치사전에 실린「聯邦制」에 대한 개념은 연방의 구성요건으로서 강력한 연방헌법, 연방최고주권기관, 연방최고집행기관, 연방사법기관등의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연방헌법과 연방사법기관의 설치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또한 연방최고주권기관과 연방최고집행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대화와 정치협상의 과정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남한에 대해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남한사회의 북한체제에의 동화적 통일을 위한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기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것이다.

「10대 시정방침」의 내용은 聯邦共和國의 수립 방식보다는 보다 선전적이며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및 통일된 후의 사회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北韓정권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일후의 사회에 있어서도 법적·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제반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내용적으로는 이들 권리들을 부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의「10대 시정방침」의 내용 중에는 민족의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제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큰 문제점은 이들 방침들을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의 과정을 거쳐 당장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연방공화국수립 이후로 연기하고 있음으로해서 북한이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관건이되는 사항들에대해 오히려 열의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것이다.

Ⅲ.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치학자 김종익교수는 1981년도 한미정치학회에서 발표한「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연방제는 몇가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남북한 쌍방의 모든 문제점과 주장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 ②준비를 위한 상설위원회가 조직되어야한다. 이곳에서 기본원칙과 더불어 연방헌법 및 연방국회조직법 등의 초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최종단계에 정상회담을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연방국회 대표자 선출과정에 있어서는 쌍방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전제조건이 주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④연방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은 대표에게 전권이 위임되어야하며, 반드시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⑤연방국회의 토의의 원활화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 중립적인 대표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학자들의 경직된 사고를 탈피하고있는 김교수의 제안은 북한이 연방제실시 이전에 남한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주장하는「전제조건」의내용들을무시함으로써 형식상 표면상으로는 북한의 연방제제안을 수용하고 있는듯이 보이나, 실질적·내용적으로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줄 조건들을 부정함으로써 북한이연방제실시를 통해 획득하고자하는 목표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김교수의 제안은 북한이합구하고있는「연방헌법」과「연방국회」조직법등의구체적제정방법조차 제시하고있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까지하는 것이다.

이미 김학준·김대중·이동화교수·천관우·황용주(전 문화방송사장)씨 등 많은 인사들에 의해 완전한 민족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인 남북한 조절장치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바, 김종익교수의 제안에 연방정부와 연방사법기관의 기능 및 구성방법에 대한 설명의 추가등 미비한 사항들이 보완되면 이는 남북간에 통일정책상의 이견의 폭을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의 형식을「통일헌법의 제정 및 이에 따른 자유총선거」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한체제의 이질성이 극단적이고 격심함으로 인해, 남 북한 사이에 신뢰회복과 동질성회복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두 체제의 하나의 체제로의 급진적 통합은 곤란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연방제를 상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방제통일은 과거에 통합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질성이 많은 국가의 통합방식으로 적합한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한의 이질성이 극단적이며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망각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김종익교수의 제안은 남북의 통일정책상의 대립이 단순한 정책상의 선호의 차이, 견해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제안의 배후에 놓여있는 보다 더 큰 이념적·현실적 대립상황의 하나의 부분적 계기로의 표출이라는 점을 정당하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지도자의 태도와 결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Ⅳ. 끝맺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것의 현실적 의미와 한계를 분석·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의 양정권이 진정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위해 남한정부는 현재와같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현상과 대외의존적상황을 시정하고 분배정의및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의 존재양식이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일뿐만아니라 한민족의 자주·자립을 밑받침하는것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화적인 民族統合을 위한 물질적·사회적 토대를 형성해내고, 정치적·사회적으로는제약받고 있는 민중의 제반권리들이 형식적·내용적인 양 측면 모두에서 보장되며 현재의 정권을 민주적인 것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분적 인간해방이아닌 보편적 인간해방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조건들을 창출해 내야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도 동시적으로「A.연방제 실시를위한 전제조건의 제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모순적 구조들을 청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가능조건들을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이 신뢰와 동질성의 기반을 상당히 회복하게 되면 통일의 정치적 형식을 둘러싼 대립은 단지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갖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평 — 과감하고 창의적 試案

유 종 렬
<정경대교수·정치학>

本 論文은 학술논문으로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며 서론부가 다소 냉철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감정적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비교적 연대순으로 잘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에대한 분석·평가가 약간 미흡하다. 대부분의 공식적인 통일논의와 재야의 통일논의들이 그런것처럼 이 글도 북한 정치체제의 특이성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결여함으로써,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복선적 목표를 내포한 북한 연방정책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못하고있다.

남북한의 통일논의의 분석도 주로 경제적 독립변수로만 해석하려는 단견성을 노정하고있다. 중·소 국경분쟁과 미·중공접근, 중공의 UN가입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이루어진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를 지나칠 정도로 무시하였다.

끝으로 강조하고싶은 것은 연방제안을 북한의 전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연방제안을 제시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한 점은 학술적으로볼때 과감한 또 창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創立4周年記念

大學生論文懸賞公募

신한은행은 82년 7월 재일동포들이 해외에서 갖은 고난 속에 모은 소중한 재산을 모국 발전을 기원하는 애국심과 성상어린 충자로 설립한 국내금융사상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 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참신한 대고객 서어비스와 경영기법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바 이번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생 여러분의 굳건한 패기와 신선한 주장이 담긴 논문을 현상 공모 하오니 많은 공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 1982. 7. 7
- 자본금 : 500억원
- 점포망 : 국내 37개소(서울 30, 지방 7개소), 국외 1개소 (일본 오오사까)
- 총예금 : 7,528억원(85년말 현재)

公募要綱

1. 資 格
-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公募論題
1) 韓國經濟의 自立과 開放
2) 地域經濟의 均衡的 發展
3) 中小企業의 生産性 向上
4) 金融의 自律化와 國際化
5) 우리나라 企業人의 價値觀

3. 應募磨勘日
- 1986. 5. 31(토)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當選作 發表
- 1986. 7. 1(화)
- 당선자 개별통지 및 한국경제·매일경제 신문에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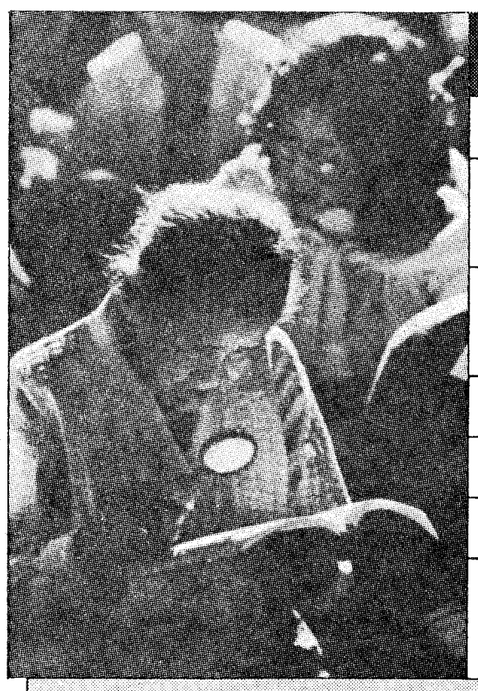
5. 賞 金
- 최우수작 1편이내 250만원
- 우수작 2편이내 각 100만원
- 가작 3편이내 각 50만원
- 입선 5편이내 각 20만원

6. 應募要領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7~8매 정도의 요약분 첨부요)
- 제 출 처 : 당행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번지) 및 지방 소재 점포

7. 其 他
- 응모작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본점 기획조사부로 문의할 것.(Tel : 756-0505)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대학교재는 역시 종로서적입니다



매장안내
- 6층 전시실/사무실
- 5층 자연과학/외국어/리프린트 구미·일본서적 (Foreign Books & journals)
- 4층 사회과학/사전 인문과학/문학/예술
- 3층 중·고교재/운구/컴퓨터
- 2층 기독교/어린이/여성
- 1층 잡지/예매권

영업시간
평 일/오전 9시~오후 9시
일 요 일/오전10시~오후 8시
공 휴 일/오전10시~오후 8시30분
정기휴일/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3, 9, 12월 제외)

종로서적의 80년 전통은 이 나라 독서문화의 자랑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4-9 ●대표전화/732-2331